

OPINION

2025년 8월 19일 화요일

기고

풍요의 전남, 그 속에서 허기지는 사람들

조옥현

전남도의원



해남군 A읍에 사는 정모 어르신(83세)은 오늘도 보행기를 밀며 마을버스를 기다린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찍는 피약별에 얼굴은 별갈게 익고, 등줄기를 타고 흐른 땀은 옷을 연신 적신다.

마을을 오는 유일한 이동수단인 버스는 두 시간에 한번씩 마을을 지나간다. 채소 한 단, 생선 한 토막을 사기 위해 왕복 두세시간이 걸리는 일상을 견디는 삶. 정 어르신에게 정보는 일은 단순한 소비가 아닌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생존의 과제다.

우리 전남도는 드넓은 평야와 청정 바다가 만나 신선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풍요로운 지역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남도민들은 밥상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다. '식품사막(food desert)' 현상이 전남 농어촌 전역으로 급격히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사막'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 생선과 같은 건강한 먹거리를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도시에선 대형마트와 배달·온라인 플랫폼이 일상화되어 저녁에 주문한 신선 식재료를 다음 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은 이러한 유통 인프라와 서비스로

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의 농어촌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은 전체 행정리 292곳 중 92%인 269곳이, 순천시는 405개 행정리 중 91%인 371곳이 식품사막으로 분류되었다.

주민들은 기본적인 먹거리를 얻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교통편이 부족한 지역은 그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먹거리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도는 긴급히 대응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일부 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장터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으로는 전남 전역에 만연한 심각한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선 기존 조례는 '기초생활편의서비스'라는 너무 큰 범주로 접근하여 식품사막 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별도의 예산과 인력 확보가 어렵고, 정책의 연속성이나 체계적 관리도 미흡하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이동장터 사업이 시행된 곳은 단지 세 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일회성 시범사업으로 그저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전남의 식품사막 문제는 더 이상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전남도 차원의 식품사막 해소 전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독립된 조례를 통해 식품사막 문제 전담 조직 설치와 예산 확보,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남 22개 시군 식품사막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최근 전북도에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연계형 이동장터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전남은 전국에서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 기부금을 식품사막 지역 주민의 식료품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복지 사업에 활용하면 기부자와 지역 주민 모두 만족할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전남형 '농협-지자체-민간 공동운영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영광 여민동락과 고흥·영암농협 사례처럼, 특정 농협 하나가 아니라 여러 농협과 지자체,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기업이 협력해 운영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참여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같은 부가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주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 위기를 우리 전남이 식품사막 해소 정책의 전국적 표준이 될 기회로 삼자. 마을에 다시 신선한 먹거리가 채워질 때, 사람들이 돌아오고 전남 농어촌에도 새로운 희망이 켜질 것이다. 밥상의 변화로 전남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기고

통합돌봄 시대, 지역주민 건강 지키는 새로운 길

박형선

광주 남구보건소장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0%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2045년경에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초과하며, 고령 인구 비율은 일본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주 남구 역시 노인 인구는 4만4875명(올해 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1.5%를 차지한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돌봄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존엄을 지키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했다.

이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정책적·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최근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과반수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 부양의 책임을 가족만이 아닌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과 가족 중심이었던 돌봄의 틀을

넘어,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발맞춰,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법제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 법은 노쇠, 만성질환, 장애,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환경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도록 제정됐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전문적인 통합평가를 거쳐 진료, 간호, 재활, 복약지도,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가족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아닌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남구는 '지역 돌봄 통합 지원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료와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 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의료급여·노인맞춤돌봄·통합사례관리 등 기존 복지업무까지 이관해 보다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사회보장정보, 질병·자격정보, 일상생활 자립도 등 37개 항목의 빅데이터를 6개월 단위로 갱신해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동 조사 및 정책 방문, 선별 조사, 심화 평가 등 데이터 기반의 현장 접근 방식은 특히 치매 환자와 고령자 가운데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돌봄 매니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남구는 이 시범사업에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7대 서비스'도 연계해 방문간호, 구강요양,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합했으며 아픈 아동을 병원까지 동행하는 긴급 지원 등 특화사업도 병행 운영하며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사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성공은 단지 법률이나 행정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돌봄문화와 이를 실현할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다.

돌봄은 본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일이다. 의료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뿐 아니라, 이웃과 자원봉사자, 지역 단체가 함께 어르신의 삶에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이에서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제 이는 단순히 내원 환자를 진료하는 기관을 넘어, 주민이 사는 곳으로 찾아가는 '현장 중심 통합 건강 돌봄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처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준비하고 책임을 다한다면, 빠르게 다가오는 고령화 위기 속에서도 누구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 수 있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설

DJ 서거 16주가...김대중 삶에서 답을 찾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은 18일,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고인의 뜻을 기르는 추모행사와 발자취를 되새겼다.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독재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대한민국 민주화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평생 실천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헌신한 지도자였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IT 강국의 초석을 다졌으며, 2000년 남북정상회담 및 햇볕정책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의 길을 열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하기도 했다.

'행동하는 양심' DJ의 뜻을 기르는 추모식은 이날 전국에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며 "김대중이 먼저 걸었던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도 공식 추모식을 갖고,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상징인 DJ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안군 하의도 생가에서 기관단체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추모제가 진행하며 김 전 대통령의 애민 정신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도당과 지역 국회의원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우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생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평화하 하루 아침에 파괴되는 광경을 직접 목도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DJ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길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주권시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김대중 정신과 맞닿아 있다. 격동의 시대, 김대중이 실천했던 애민정신,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에 대한 통합과 화해의 손길이 어느 때 보다 절실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거인' 김대중이 실천했던 화합과 포용의 정신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애물단지 '무등의 빛' 존폐 고민할 때

지난 2020년 호남고속도로 광주돌봄게이트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조형물인 '무등의 빛'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한다.

광주 관문에 '광주다움'을 담은 랜드마크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호평 일색이던 조형물인데 불과 5년여 만에 골칫거리가 됐다는 소식에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설치 당시 '무등의 빛' 조형물은 세간의 큰 주목을 끌었다. 지역이 낳은 미디어아트의 거장 타이완 작가 김민국 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대표와 협업으로 탄생시킨 세계 최초의 비정형 미디어아트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미디어아트 작품이 도시 관문인 톨게이트 위에 설치돼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만의 개성 넘치는 독창적인 풍경을 외지인들에게 선사하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폭 74m·높이 8m의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은 무등산 사계와 낮과 밤, 의향, 여향, 미향이라는 3향을 담은 영상을 무등산 산맥을 구현한 3개 면에 각각 송출했다.

하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 작동이 수개월 간 멈추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

외부 노출과 비바람에 취약한 전자기기가 탓이다. 이 때문에 점검과 보수에 들어가는 수 천만원의 시한 헬세가 해마다 낭비되고 있다.

실제로 무등의 빛은 지난해 17일부터 폭우로 인해 작품을 구성하는 전자 모듈 판에 이상이 생기면서 한 달 가까이 영상 송출이 끊겼다. 앞서 2023년과 지난해에도 강풍과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부품 손상으로 수시로 운영이 중단됐었다.

매월 부과되는 전기세만 280만원이다. 여기에 연 6회 진행되는 정기 점검비, 긴급보수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행정 당국에 묻고 싶다.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말이다. 외부에 노출된 시설이어서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상식의 영역이다. 아무런 의도가 좋았다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이 제 '도시마케팅 브랜드'이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조형물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때다.

취재수첩

전남 농산물의 재도약 신호탄

이승홍

지역사회부 부장



아무리 품질이 뛰어나도 이름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주목받기 어렵다. 전남 농산물이 오랫동안 겪어온 현실이다. 기후와 토양, 수자원이 빛어낸 천혜의 생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분산된 브랜드와 취약한 유통구조 탓에 제값을 받지 못했다.

특히 정성과 손맛으로 가꾼 농산물이 중간 유통에 휘둘리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와 농협 전남본

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광역 농산물 브랜드' 전략이다. 산지별로 흩어진 브랜드를 하나로 묶어 품질과 신뢰를 통일된 이름으로 담아내겠다는 시도다. 그 결과 '오매향'과 '삼공애'가 탄생했다. 각각 아열대 과일과 원예농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 반응은 고무적이다. 완도의 유기농 바나나는 수입산 일색이던 시장에서 국산 바나나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화순의 미니파프리카는 젊은 세대 소비층을 사로잡았다. 브랜드 특판전에서는 준비 물량이 조기 완판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

효과는 관측 행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교급식과 친환경 유통망으로 납품이 확대되고, 수도권 10여개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와 협약도 체결됐다. 납도장터 올라

인물과 라이브커머스는 지역과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창구로 자리잡았다.

숫자도 변화의 크기를 보여준다. 광역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협은 51곳으로 늘었고, 취급 품목도 22개에서 30여개로 확대됐다. 전체 출하량은 2년 만에 2만에서 8만으로, 매출은 2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4배 성장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브랜드가 소비자 신뢰를 얻으려면 일관된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마케팅 투자가 필요하다. 또 단순한 관측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급식·공공급식·도시 유통망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농협이 유통과 판매를 책임지고, 농가는 재배에 전념하는 역할 분담이 정착돼야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

전남은 오랜 세월 '농도의 뿌리'라 불리며 우리 농업을 이끌어왔다. 이제는 그 풍부한 생산력에 걸맞은 브랜드 경쟁력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오매향'과 '삼공애'가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농산물 시장에서 전남의 이름을 굳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